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ㄱ,ㄴ순)

담당자 채민(전화 063 278 9331, / 팩스 063 278 9332 / 메일 onespark@chol.com)

[성명]

KT는 연이은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6일 KT전북본부 익산지사 소속의 노동자가 통신케이블 관련 작업(케이블 매니저, 이하 CM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치8주의 복합 골절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익산지사에서는 작년 6월에도 동일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었다. 지난 5월에는 과로에 시달리던 직원이 퇴근 중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잇단 산재와 사고에도 노동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경영에 반성하지 않은 회사로 인해 또 다른 산재가 발생했다. 우리는 산재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KT경영진을 규탄한다!

그간 발생했던 산재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KT에서 그 동안 진행된 잔인한 노동자 퇴출과 비인간적 노무관리에서 비롯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2인 1조 작업이 안 지켜진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다. 형식적으로는 2인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출동 이후에는 각자 하나씩 전주 작업을 맡아 개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 역시 개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는 않는 것에는 KT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명예퇴직 등 대규모 노동자 퇴출 이후 줄어든 인원이 예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안전을 챙겨가며 작업을 할 여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한 CM작업 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과거 현장 개통이나 A/S 업무를 하던 직원이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직무전환으로 CM작업을 맡으며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직무전환 과정에서 2박 3일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채 바로 CM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이런 부실한

직무전환 교육도 산재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실한 직무전환 교육에서 안전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4년 구조조정 직후 CM작업을 하던 숙련된 노동자 상당수가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노조 활동가 등의 이유로 '업무지원단'(구 CFT)이라는 별도의 퇴출기구로 배치되는 바람에 인력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 측면도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숙련된 직원은 엉뚱한 부서로 배치하면서 직무전환이 된 직원은 부실한 교육만 진행하고 업무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영이 결국 노동자들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CM작업을 하는 많은 KT노동자들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번 산재사고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전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CM작업을 위한 안전 작업 차량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환경, 주업무가 아닌데도 상품판매 실적평가를 하면서 몇몇 직원을 CM작업이 아닌 상품판매에만 집중하라고 배치하는 문제점도 함께 있다.

산재 문제는 KT업무지원단의 직원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KT업무지원단에서는 업무효율과는 무관하게 부여된 중고 단말기 회수 등을 위해 장거리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의 업무지원단 노동자들은 진안-익산, 임실-정읍 및 김제, 부안-군산 등을 오가며, 하루 5~6시간 동안 매일 200Km이상을 운전하는 일이 다반사다. 피로도가 높아지는 장거리 운전과 비효율적인 일이 계속되다 보니 업무지원단에서는 올해만 이미 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월 29일에 업무지원단 철 폐투쟁위원회는 단말 회수업무를 각 지사, 지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지원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황창규 KT회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비용절감과 이윤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현실에 시민들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노동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영은 더 이상 안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황창규 KT회장과 경영진 역시 지금까지 발생한 즉각 비안간적인 퇴출경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받아들여 안전과 생명,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2인 1조 작업 보장, 안전 작업 차량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 비효율적인 퇴출을 위한 업무지원단 폐지 등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KT가 산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 7. 1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